

企劃豫算室 2001年 主要業務計劃

中央行政權限의 地方移讓 推進

지방이양의 목적

- ◇ 국가사무 및 지방위임사무를 발굴하여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
- ◇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인 사무분담체계 구축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
- ◇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

I. 地方移讓 推進經緯

- 지방이양추진을 위한 법령제정
  - '99. 1 「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법률」 제정
  - '99. 7. 같은법 시행령 제정·시행
- 이양추진기구 구성·운영
  - 지방이양추진위원회
    - 대통령소속 의결기관으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며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
  - 지방이양추진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
    - 이양추진위원회 심의를 보좌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와 3개 분과위원회 운영

II. 2000年 地方移讓 推進實績

- 지방이양추진 기본계획 확정(2000. 1)
 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 원칙 및 이양추진 방향
  - 지방이양 추진일정 등
- 지방이양대상사무 발굴
  - 발굴시기 : 2000. 2. 15 ~ 3. 25
  - 발굴분야 : 12개 분야에 대해 16개 시·도가 분담조사
  - 발굴실적 : 우리 시 97건 발굴 건의(전국 종합 684건)
- 이양추진위원회 활동
  - 지방이양추진위원회 : 5회 개최
    - 심의안건 : 393건(이양결정 267건, 보류 73건, 현행존치 53건)
  - 지방이양추진 실무위원회(5회) 및 분과위원회(33회)

- 이양추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심의·조정

- 지방이양 추진실적
  - 지방이양 확정 : 267건
  - <이양형태별 이양확정 현황>

합계	이양 형태별 현황			비고
	국가 → 시·도	시·도 → 시·군·구	기타 (공동사무등)	
267	110	123	34	

III. 2001年 地方移讓 推進計劃

【中央政府 推進計劃】

- 지방이양 추진지침 확정(2001. 1)
  -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로 과감한 지방이양 추진
  - 사무이양과 인력 및 재정지원 병행추진
  - 지방이양사무 운영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
- 지방이양대상사무의 대대적 발굴
  - 국가사무 총 조사를 통한 지방이양대상사무 발굴용역 실시
    - 2001. 2 ~ 11(10개월)
- 기관위임사무의 단계적 자치사무화
  - 기 조사된 기관위임사무 이양여부 심의 : 19개 부처 840개 사무
    - 장기적으로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축소
- 이양사무의 사후관리
  - 이양 확정후 30일 이내에 관련부처의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화
  - 지방이양에 따른 행정·재정지원 강화
    - 「지방이양 행정·재정지원단」 운영을 통하여 이양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지원책 강구

【우리 시 推進計劃】

- 사무의 전수조사를 통한 지방이양대상사무 발굴
  - 2001. 3월 ~ 7월(5개월간)
  - 법령 및 자치법규상 사무 전수조사
    - 조사와 병행하여 지방이양대상사무를 발굴
    - 시와 자치구간 사무배분 자료로 활용
- 「이양촉진단」 구성·운영
  - 전문가 및 적능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양촉진단 구성
    - 내부적인 사무발굴 방식에서 외부전문가

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

※ 사무발굴기획단을 「지방이양추진단」으로 확대개편하여 이양추진을 활성화하고 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거쳐 수행

- 이양추진 및 이양확정사무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적 의견수렴
  - 사무의 발굴 및 이양추진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종합검토
  - 이양 확정된 사무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대책 건의안 마련
- 이양추진과정에 적극 대응
  - 지밀한 이양논리를 구성하여 위원회에 우리 시 입장을 적극 반영
  - 중요사항인 경우 「전국 시·도지사협의회」 등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대처
- 행·재정적 지원 적극 건의
  - 사무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규모 등을 산정하여 지방이양추진 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에 요구
  - 지방사무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건의
    - 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·수입액 산정시와 자치구 분리산정

IV. 向後日程

- 인·허가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 추진
  - 중앙부처의 인가·등록·허가업무를 전수 조사하여 일괄 이양추진
- 「지방이양일괄법」 제정 검토
  - 이양확정사무에 대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이양관련 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일괄법 제정 검토
  - 제정시기 : 2003년

※ '91년부터 총무처 소속 지방이양 합동심의회가 지방이양을 추진하여 이양성과가 다소 미흡하였음.

- 「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법률」('99. 1) 제정·시행에 따라 「지방이양추진위원회」가 대통령 소속의결기관으로
-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중앙부처에 이행의무가 부과되어 사무이양에 유리한 여건임.

廣域行政業務의 效率的 推進

- ◇ 수도권 지역의 현안 행정문제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「수도권행정협의회」의 기능 내실화
- ◇ 광역자치단체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「전국시·도지사협의회」 운영의 활성화

I. 「首都圈行政協議會」運營

- 구 성('88.11.16)
  - 수도권 5개시·도(서울, 인천, 경기, 강원, 충북)
- 2001년 본회의 개최계획
  - 상반기(제13회) : 경기도, 하반기(제14회) : 충청북도
- 추진방향
  - 분야별 실무회의 수시 개최
  -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실효성 강화
  - 건의사항 수용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추진
- 운영실적 -12회 개최, 151건 협의

계	도	로	교	상·하수 통도관리	환	기
151	51	24	23	14	39	

II. 「全國市·道知事協議會」運營

- 구 성('99. 1. 23)
  - 전국 16개시·도 (회장 : 서울특별시장)
- 2001년 본회의 개최계획
  - 4월(제6회) : 경상북도, 8월(제7회) : 경기도, 10월(제8회) : 전라북도
- 추진방향
  - 지방자치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공동 추진
  - 각 시·도 공동관심 사항 논의

운영실적 : 총5회 개최, 76건 협의  
(합의 10건, 중앙건의 66건, 합의율 100%)

- 「한·일 시·도지사회의」 개최
  - 제2회 본회의 개최 : 2001. 3/4분기 이후
  - 회의 주요일정 : 주요 정부인사 예방, 월드컵경기장 시찰, 주요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역 방문</p> <p>- 회의 주요의제 · 2002 월드컵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자치단체간 협력 강화 · 한·일 양국의 지방자치행정 발전방안 협의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margin: 5px 0;"> <p>제1차 회의개최 실적 - '99.11. 9~12(도쿄)</p> </div> <p>○ 참석 : 「전국시·도지사협의회」 대표 3명 (서울시장, 부산시장, 전남도지사) ○ 협의내용 : 지방자치 발전방안 등 의견 교환, 상호방문 정례화 합의</p> <hr style="border-top: 1px dashed black;"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行政官理局 主要業務報告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住民自治센터 活性化 方案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margin: 5px 0;"> <p>○ '99년부터 실시중인 동사무소기능전환은 2001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○ 나아가, 지역주민에게 생활정보 및 문화·복지프로그램 제공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과 주민자치의 장이 되는 주민자치센터로 육성하고자 함.</p> </div>	<p>□ 推進概要</p> <p>○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 실태 일제점검 : 3월중 행자부 합동 - 우수자치구 : 운영비 지원, 기관 및 유공 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- 부진자치구 : 감사의뢰, 운영비지원 보류 등 페널티 부여</p> <p>○ 활성화 방안 강구 -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시간 확대 - 홍보활동 강화 및 민간사회단체 협조체제 구축 - 운영비 지원 등</p> <p>□ 推進実績</p> <p>○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 : 23개구 - 92.0% - 미제정구 : 2개 구(서초, 강남) ○ 주민자치센터 설치완료 : 10개구 272개동 - 52.1%</p>						
(단위 : 동)							
설 치 완 료			설 치 미 완 료				미 추 진
계	공사완료	기존시설 활 용	계	공사중	설계완료	설계등 준비중	
272 (52.1%)	260 (49.8%)	12 (2.3%)	224 (42.9%)	153 (29.3%)	2 (0.4%)	69 (13.2%)	
<p>※ 미추진 26동은 협소, 신축 등</p> <p>○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완료 : 20개 구 431개 동 - 82.5% - 미 완료 : 5개 구(용산, 성북, 서초, 강남, 강동) 91동</p> <p>□ 住民自治센터 運營實態 및 問題点</p> <p>○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- 컴퓨터, 건강교실위주로 운영, 보육원, 동네가꾸기, 내집앞 즐기기 등 사회복지·진흥 프로그램이 부족 - 서민층 밀집지역임에도 취업상담소, 보육원 등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부족 ○ 운영시간 제한(일과중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- 일과시간 중심으로 운영, 직장인 등의 이용이 곤란</p> <p>○ 강사, 자원봉사자의 참여 미흡</p> <p>○ 주민자치센터의 서비스기능, 이용방법 등에 대한 홍보부족</p> <p>○ 운영예산의 부족</p> <p>□ 向後 推進計劃</p> <p>○ 지역실정이 고려되고, 계절별 특색을 살리며, 참여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- 취업센터, 탁아방, 농수산물 직거래, 알뜰매장, 불우이웃돕기 등</p>							